

NEWSIS

통일부, 교류협력국→교류협력실 승격..남북협력 방안 모색

김성진 입력 2020.01.07 12:12

통일부, 교류협력국→실로 승격하고 3개 과 추가
 사회문화교류 2개로 분과..교류협력 다변화 추진
 남북접경협력과 신설..DMZ국제평화지대화 지원
 총원 604명 그대로 유지..공동지원인력 효율화"



[서울=뉴스시스]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진=뉴스시스DB)

[서울=뉴스시스] 김성진 기자 = 통일부가 정부 및 민간의 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및 접경지역 협력 등에 통해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기존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협력실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을 두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남북공동행사부터 체육·예술분야 행사까지 다양한 교류협력을 담당해왔던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나뉘지게 된다.

신설되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는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해 노동, 정당 등 교류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는 역사, 체육, 문화, 예술 분야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행사와 체육·예술분야 행사 등이 동시에 열리면 기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며 "정책 고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교류협력 다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접경협력과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다.

특히 남북접경협력과는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접경위원회'가 향후 신설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기획조정실에 '통일 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기로 했다. 총 정원 604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실장직의 경우, 현재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여 교류협력실장직 정원으로 돌리게 된다.

또 하나원 화천분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소속 지원인력 정원도 이번엔 확대되는 본부 조직으로 이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속기관의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통 지원인력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확정·시행될 전망이다.

☞ 공감언론 뉴시스 ks87@newsis.com